

R&I TRENDS

EU R&I 주간 브리핑

2025.10.01



Contents

▶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 ① 집행위, 유럽경쟁력기금은 기술 상용화에 집중할 것(9.30)
- ② 집행위, 호라이즌 유럽에 추첨(lottery) 방식 도입 검토(9.23).
- ③ EU 경쟁력 이사회 회의, 호라이즌 유럽에 이중용도 포함에 관한 논의 진행(9.30)
- ④ 유럽 소형모듈원자로(SMR), 더 많은 R&D 자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9.25)
- ⑤ 유럽회계감사원(ECA), 지역 혁신 전략과 EU 혁신 전략 간 연계 강화 촉구(9.24)
- ⑥ 새로운 항생제 내성 연구 파트너십 출범(9.30)
- ⑦ 유럽 대학 단체, EU 비자 전략에 '심층적 개혁' 필요(9.23)
- ⑧ 집행위, 연구기반 정책브리프 작성에 관한 실용적 조언 제공(9.30)
- ⑨ 메타과학(metascience) 연구, 기관 운영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영진 반발과 예산 부족에 직면(9.30)

▶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 ① 유럽혁신위원회(EIC) Transition 공모에 역대 최대 제안서 접수(9.29)
- ② 집행위, 기술 인프라 자본 수요에 대한 분석 보고서 발간(9.25)
- ③ 집행위, 호라이즌 유럽의 기술 진행상황을 분석한 TRL 분석 보고서 발간(9.25)
- ④ 유럽 7대 연구 인프라 프로젝트(9.23)

▶ EU 연구성과

- ① (성공사례) 유럽 농지 유기농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
- ② (성공사례) New Cotton 프로젝트, 폐섬유를 활용한 순환형 해결책 제시

1.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1] 집행위, 유럽경쟁력기금은 기술 상용화에 집중할 것(9.30)

- 집행위원회는 차기 EU 예산안에서 연구혁신 자금은 전적으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고, 유럽경쟁력기금(ECF)은 배포(deployment) 활동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밝힘
 - 집행위 연구혁신총국(DG RTD) 에스포지토 전략기획부장은 EU 조약(TFEU)에 따라 연구혁신은 반드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지원 가능하며, ECF는 연구혁신 활동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단언
 - 현재 호라이즌 유럽의 유럽 파트너십이 일부 배포 활동을 지원하지만, 이는 향후 ECF로 이전될 예정
 - 집행위는 당초 호라이즌 유럽(1750억 유로)과 ECF(2340억 유로)를 긴밀히 연계해 연구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계획했으나, ECF가 중간 단계의 전환 연구나 전략 분야의 기초연구도 지원할 것이라는 추측이 배제된 것으로 보임
 - 유럽연구대학연맹(LERU)은 ECF가 기초연구를 지원할 수 없다면, 해당 예산 일부를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 ※ 호라이즌 유럽 예산 중 440억 유로는 유럽연구위원회(ERC)와 마리퀴리(MSCA) 연구자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되며, 이는 현행(226억) 대비 두 배 규모
- 유럽대학협회(EUA)도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호라이즌 유럽과 ECF 간 역할 구분(자금 지원,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촉구
- ECF와 호라이즌 유럽은 원칙적으로 자금 지원이 별도로 유지되나, 프로그램 간 운영 방식은 중첩될 가능성이 있음

- 호라이즌 유럽 필라2 예산 중 680억 유로는 ECF의 4대 정책창구와 연계될 예정이며, 각 정책창구별 단일 워크프로그램에서 호라이즌의 연구혁신 과제와 ECF의 배포 활동이 통합될 계획
- * 청정전환·탈탄소화, 보건·바이오테크·농업·바이오경제, 디지털리더십, 회복력·안보·방위산업·우주
- 호라이즌 유럽 지원 과제는 워크프로그램에 특정 섹션으로 구성
-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에스포지토 전략기획부장은 향후 워크프로그램이 현재처럼 2년 단위로 발표될지 확정하기에 이르며, 반년 단위의 워크프로그램이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
- 집행위는 EU와 회원국의 자금 집행 우선순위를 조율하기 위한 '경쟁력 조정 도구(Competitiveness Coordination Tool)'도 도입 예정이며, 11월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채택 예정

○ ECF의 비경쟁적 방식 공모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존재

-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 자본 지원으로 혁신의 확장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InvestEU와 같은 수단이 성과 기반 경쟁에 의존할지,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현재 InvestEU에서는 자금이 유럽투자은행(EIB) 등 중개기관을 통해 전달되는 반면, ECF 제안서 20조에 따르면 공익 목적이나 긴급한 경우 일반적 지원 절차를 우회할 수 있음. 이는 경쟁 절차 외의 자금 지원을 의미할 수 있음
- 집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우수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겠지만, 전략적 사안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여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유지해야 한다 주장
- 유럽의회에서는 이러한 예외 조항의 적용 방식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나옴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planning-fp10/eu-competitiveness-fund-will-not-finance-research-activities>

② 집행위, 호라이즌 유럽에 추첨(lottery) 방식 도입 검토(9.23)

- 집행위는 일부 국가 연구재단들이 시범 도입한 방식을 참고하여 호라이즌 유럽에 추첨 또는 무작위(Randomisation) 자금 지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
 - 이 방식은 일정 품질 기준을 충족한 제안서가 추첨에 들어가며, 순수한 동료평가(Peer-Review)가 아니라 무작위로 당첨자가 선정됨
 - 이는 동등한 수준의 프로젝트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하고 경쟁력 공모에서 발생하는 편향을 줄이기 위함임
 - 9월 16일 열린 호라이즌 유럽(HE) 간소화 관련 토론회에서 자하리에바 집행 위원은 이 아이디어에 긍정적 피드백만 접수되었다고 언급. 다만 여전히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향후 2년 안에 시행할 계획은 없음을 밝힘
 - 자하리에바는 추첨 방식이 현행 제도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현재는 극히 작은 점수 차이가 최종 결과를 좌우하며, 컨설턴트가 제안서를 ‘다듬는’ 능력이 실제 연구의 임팩트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
- 동 토론회는 HE 행정 절차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수렴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아이디어 및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제안서 양식 재설계부터 평가 절차 재고
 - 연구자들의 호라이즌 유럽의 복잡성에 대한 불만
 - 일부는 공모문(call text) 자체 이해가 어려워 컨설턴트에 의존
 - 자하리에바 본인도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조를 이해하려다 ‘악몽을 꿔다’고 밝히며, 관료들이 전문 용어(jargon) 대신 ‘인간적인 언어(human language)’를 써야 한다고 촉구
 - 다수 제안은 이미 집행위가 검토 중인 개혁과 유사하며, 현행 규정이 매우 ‘규정적(prescriptive)’이기 때문에 근본적 변화는 2028년 시작될 차기 HE 프로그램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
- 자하리에바의 핵심 목표는 보조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time

to grant)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명시

- 이는 현재 평균 240일(약 8개월)이 소요되는데, 기업들은 더 짧은 일정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 오스트리아 내화물 제품 제조업체 RHI Magnesita의 오로스는 “혁신의 타이밍은 핵심인데, 오래 걸리는 절차는 위험을 가져오고 참여도를 떨어뜨린다”고 발언
- 집행위는 최대 7개월로 단축할 것을 약속했으며, 자하리에바는 별다른 가능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2단계 공모에서 1단계 마감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설명(과거에는 반대 입장)
- 공모의 하향식(prescriptive) 성격을 줄이고 상향식(bottom-up) 접근 확대 실시
 - 연구 커뮤니티는 꾸준히 자유 주제 공모를 요구, 집행위는 2026~27년 워크 프로그램에서 위 방향(하향→상향)으로 이동 중이며, 자하리에바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 언급
 - 그러나 집행위 단독 권한은 아니라고 덧붙임. HE는 집행위, 회원국, 유럽 의회 등 다수의 ‘설계자들’이 얹혀 있어 다양한 우선순위와 프로젝트가 반영
 - 자하리에바는 “종종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집행을 타하지만, 실제로는 각 이해관계자가 자기 제안을 붙들고 있어 결국 3,000페이지에 달하는 지나치게 규정적인 공모문이 된다”고 언급
- 럽섬펀딩(lump-sum) 보조금 제도의 지속적 확대
 - 일괄금을 지급하는 럽섬펀딩 보조금 제도는 실제 비용 보고 대신 합의된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단순화 방식을 의미, 그러나 HE에서의 도입은 논란을 불러왔다고 언급
 -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는 연구자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프랑스 정부에도 동일한 방식을 권고하였으나, 독일의 첨단 기술 기업과 네덜란드의 한 연구기술기관은 부정적 반응을 표명
 - 현행 프로그램 종료 시점까지 공모의 50%는 일괄금액을 적용할 예정이며, 자하리에바는 차기 프로그램에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 개선 제안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

○ 제안서 양식(template) 개편 논의

- 현재는 오픈사이언스, 데이터 관리, 성평등 등 요구사항을 Part B에 기술해야 하고, 이는 평가 점수에 반영됨. 다수는 이를 Part A(행정 파트)로 옮겨, 의무는 유지하되 평가점수에는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 이 경우 심사자가 혁신적 아이디어와 임팩트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일부는 평가 시작 전 적격성 실시간 검증 도입을 제안
- 자하리에바는 “프로젝트 핵심과 임팩트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항목은 평가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동의, 이미 2025년부터 ‘중대한 피해금지 (Do No Significant Harm)’ 원칙과 AI 강건성 요건을 삭제했다고 언급

○ 성평등 계획(Gender Equality Plan) 개편 추진

- 현재 HE 참여를 위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은 성평등 계획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2025년 개편 시도가 있었으나 회원국 반대로 무산
- 자하리에바는 “이 계획들이 단순히 컨설턴트용 문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 평가 개선 논의

- 참석자들은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피드백, 적절히 매칭된 평가 패널, 평가 결과의 과도한 관료적 언어 개선 등을 요구
- 집행위 관계자들은 제안을 검토하겠지만 큰 변화는 약속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연구혁신총국 공통집행센터(CIC)의 월 국장은 “세상 최고의 피드백을 받아도 돈은 절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계가 있음을 언급

○ Funding & Tenders 포털 개선

- 집행위의 온라인 포털은 여전히 불편하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집행위는 개선을 약속, 차기 EU 예산안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위한 단일 게이트웨이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horizon-europe/commission-considers-lottery-awards-horizon-europe>

③ EU 경쟁력 이사회 회의, 호라이즌 유럽에 이중용도 포함에 관한 논의 진행(9.30)

- 지난 9월 30일 EU 경쟁력 이사회 회의에서 EU 연구장관들이 '이중용도, 안보 및 방위 분야를 위한 EU 연구 및 혁신'을 주제로 호라이즌 유럽 패키지에 대한 정책 토론을 진행
 - 회의는 덴마크 고등교육과학부 에겔룬드 장관이 주재하고, 집행위에서 스타트업·연구혁신 담당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이 대표로 참석
 - 회의에서는 2028~2034년 호라이즌 유럽 패키지에 이중용도 기술 및 방위 응용 분야 포함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EU 연구혁신이 이중용도 기술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유럽 안보와 방위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
 - 장관들은 집행위의 차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제안에 대한 유사한 견해를 표명했으며, 민감 분야에만 초점을 맞추던 원칙을 폐지하는 방향에 대해 변화된 지정학적 상황에 부응한 필수적인 대응으로 평가
 - 폴란드 연구장관은 사이버보안, AI, 드론, 로봇 등 전략적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희망함을 밝혔고, 벨기에 혁신장관은 민간과 군사 연구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며 신중한 긍정 입장을 표명
 - 덴마크 의장국은 이중용도 기술과 방위 응용 연구가 호라이즌 유럽에 포함될 경우 그 영향, 새로운 이해관계자, 민감한 데이터 처리, 제3국과의 협력, 보안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
 - 이와 함께, 과도한 행정 절차 방지, 과제 선정의 우수성 중심 원칙 유지, 개방 과학 접근법 지속, 외부 간섭으로부터의 보안 확보 필요성 등이 강조됨
 - '이중용도 연구'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고, 유럽혁신위원회(EIC) Accelerator를 통한 순수 방위산업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림
- 또한 EU의 스타트업·스타트업 전략에 있어 연구혁신의 중요성 및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명과학 분야 행동 촉구 등에 관한 두 가지 이사회 결론을 채택

- 첫 번째 이사회 결론은 EU의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데 있어 연구혁신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하고, 특히 딥테크 및 과학기반 스타트업의 연구-혁신 생태계-자금조달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
- 두 번째 결론은 글로벌 보건 문제 해결, 산업 경쟁력 확보, 유럽 전략적 자율성 강화에 있어 생명과학 분야의 역할을 강조하고, 목표지향적 조치를 촉구. 이를 위해 연구혁신 환경, 산업정책, 보건 시스템, 인력 개발 간의 조율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
- 기타 안건으로,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EU 연구 정책 간소화·이행·집행에 관한 2025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9월 15일 채택된 '유럽 연구 및 기술 인프라 전략'을 소개
- 다음 공식 회의는 2025년 12월 9일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덴마크는 호라이즌 유럽 패키지에 대한 진행 보고서를 준비 중이며, 장관들은 AI 기가팩토리 및 EU 양자전략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EuroHPC 공동사업단 규정 개정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1	https://era.gv.at/news-items/eu-research-ministers-discuss-eu-research-and-innovation-for-dual-use-security-and-defence/
출처2	https://www.researchprofessional.com/0/rr/news/europe/horizon-2020/2025/9/Ministers-back-opening-Horizon-Europe-to-dual-use-projects.html

4 유럽 소형모듈원자로(SMR), 더 많은 R&D 자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9.25)

- SMR 업계, 추가적 자금 지원 필요성 강조. 데이터 개방 요구도 제기
 - 소형모듈원자로(SMRs)가 점점 더 많은 정치적 지지를 얻고 있으며, Euratom 프로그램을 통한 원자력 R&D 지출 증액 계획으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업계 관계자 및 다른 관측자들은 이 정도로는 SMR의 신속한 배치(deployment)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
 - 원자력 업계 단체 NucelarEurope의 브뤼탱 사무총장은 SMR 공급업체들이 자체 연구를 진전시키고 SMR 배치를 가속화하며, 공급망 역량 확대를 위해 자금과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고 발언
 - Euratom 차기 프로그램의 원자력 분열 R&D 예산 증액은 긍정적인 발전으로 평가되지만, 이러한 격차를 해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브뤼탱은 SMR 연구가 배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EU 자금 메커니즘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브뤼탱은 “프로젝트 보유자와 공급업체들은 Euratom 자금을 일부 연구에 사용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가 보통 장기간이고 특정 공급업체에 유용한 무언가를 생산하려면 지적 재산 일부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 충족하지는 못한다”고 설명
 - OECD 원자력기구(NEA) 핵안전 수석전문가 자크맹은 업계의 데이터 공유 거부가 진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
 - 자크맹은 “공급업체 데이터 접근 제한이 협력 연구와 공동 인프라 개발을 방해한다”며 “동시에 새로운 설계 연구는 완전한 안전 근거(safety case)보다는 개념증명(proof of concept)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요한 안전 지식 격차가 남아 있고, 이는 규제 승인 및 일부 개념의 배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
- 공개 데이터(Open Access Data)
 - 이탈리아 신기술·에너지·지속가능개발청(ENEA) 핵 부서의 마스카리

연구원은 SMR 역량 강화에 있어 결과 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배치를 더 가속화하기 위해 연구는 공개 데이터를 개발하는 대규모 실험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발언

- EU가 기존 인프라 활용에 더해 대규모 실험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 이를 통해 신뢰성 있는 계산 도구 및 방법론을 개발하며, 효과적인 사고 관리 전략을 평가하고, 새로운 세대 전문가를 훈련할 수 있다고 설명
- 특히 전문가 양성을 안전한 원자력 기술을 제때 배치하는 데 핵심임을 강조
- 프랑스의 납냉각 SMR 개발업체 Newcleo 역시 인프라 격차를 지적했는데, 대변인은 유럽에는 첨단 모듈형 원자로(AMRs, SMR 포함)용 소재·연료 시험을 위한 범유럽 협력 R&D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설명
- 특히, 고속 중성자(high flux, high-power fast neutron) 조사 시설이 결여되어 있다고 강조

○ 현재 18개국에서 80개 이상의 SMR 기술 설계가 개발 단계에 있으나,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SMR은 극히 적음

- 대표적 사례는 러시아의 해상 원자력 발전소 Akademik Lomonosov(KLT-405 SMR 2기 탑재), 중국 화닝그룹 소유의 고온가스로 모듈 원자로 HTR-PM
- 유럽에서는 노르웨이, 스웨덴, 폴란드가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나, 대부분은 아직 투자 전(pre-investment) 단계에 머물러 있음
- Euratom은 현재 안전성과 성능 문제를 다루는 16개 SMR 프로젝트를 공동 자금 지원 중이며, 연구 주제에는 사고 시나리오 분석, 수동 안전(passive safety), 인허가 조화, 신형연료,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 등이 포함

○ 연구격차

- 마스카리는 “안전은 기후중립 2050 달성과 유럽 에너지 안보·자립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핵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초석”이라고 강조
- Newcleo는 안전이 산업의 책임이라고 보며, 연구자들은 EU 전역에서 인허가 가능하고 대규모 제조가 가능한 설계를 통해 배치를 고려한 솔루션을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
- 자크맹은 원자로 설계 및 안전 분석을 지원할 수 있는 다중물리 시뮬

레이션 개발, 기본 및 신기술 연료 성증 향상, 지속가능한 사용후핵연료 및 폐기물 관리 전략 조기 도입 등을 연구 우선순위로 제시하였음

- 자크맹은 확인적(confirmatory) 연구와 예측적(anticipatory) 연구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함

※ 확인적 연구: 설계자가 제시한 주장은 독립적으로 검증해 규제 감독 신뢰성을 지원

※ 예측적 연구: 초기 단계에서 새로운 개념에 안전 원칙을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마스카리는 SMR이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과 호환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가 진화해야 하며, 유럽 각국 간 규제 조화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고 국경 간 배치 및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언급

○ 산업계의 입장으로 Newcleo 대변인은 “AMR 안전·인허가 프레임워크 공유는 시장 배치를 가속화하고, 회원국 전역에서 표준화된 원자로 설계를 확장하며, 프로젝트가 투자 가능하고 예산·일정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

- 그러나 무엇보다 EU 차원의 “명확하고 장기적인 원자력 배치·지원 정책 약속”이 필요하며, 이는 산업 위험을 줄이고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에 필수적
- 대변인은 “미국은 연방 차원의 명확한 약속으로 강력한 민간 투자가 촉발되었으나, 유럽은 여전히 혼재된 신호를 보낸다”고 지적
- “Euratom의 제안된 새 예산은 긍정적 진전이지만, 현행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MFF)는 원자력 프로젝트 배치 자금 지원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투자자 신뢰를 약화 시키는 구조적 모순을 낳고 있다”고 강조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nuclear-fusion/more-rd-funding-needed-europes-small-modular-reactors-observers-say>

5 유럽회계감사원(ECA), 지역 혁신 전략과 EU 혁신 전략 간 연계 강화 촉구[9.24]

- 집행위, 상향식(bottom-up) 지역 특화 전략과 하향식(top-down) 혁신 정책 간 연계 강화 필요성 제기
 - EC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집행위가 상향식 지역 특화 전략과 하향식 혁신 정책을 더 긴밀히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특히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에서 연구혁신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들이 스마트 특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조건으로 요구됨
 - ※ EU의 스마트 특화 정책은 각 지역이 고유한 강점과 잠재력에 집중하도록 해, 결속 정책 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하기 위함
 - 이번 검토를 담당한 ECA의 튀르텔뭉 위원은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 방식을 조화시키고, 지역에서 실제로 시행되는 조치들이 EU 차원의 결정과 일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EU 기금이 전략적·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
 - 스마트 특화 전략 요건은 ERDF의 2014~21년 기간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2021~27년 기간에도 지속될 것. 스마트 특화에 의해 인도되는 결속 자금은 두 차례 예산 기간 동안 총 739억 유로에 달하나, 집행위는 이 자금이 올바른 분야에 투자되고 있는지는 불명확한 상황
 - 집행위의 역할은 전략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우선순위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EU 산업정책 목표와 맞게 위치되어 있는지 보장하는 절차는 부재함
 - ※ 우선순위는 지역 당국이 기업, 연구자,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
 - 감사원은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 방식이 상호 보완적일 수 있으며, 지역 잠재력에 기반한 미래 강점과 잠재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지난 6월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집행위 관계자들이 차기 예산기간에는 상향식과 하향식 우선순위 설정의 연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 스마트 특화는 2027년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계속될 전망
- ECA는 2010년 처음 발표된 ‘스마트 특화 개념(smart specialisation concept)’이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유럽 내 혁신 격차를 해소하는

목표를 달성하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평가

- 이 정책은 2014년부터 시험 적용 없이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 집행위는 ERDF 연구·혁신 투자에 대한 영향이나 전반적 성과를 미평가. 튀르텔봄은 이를 문제로 지적하였고, 집행위는 스마트 특화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외부 연구를 발주했으며, 그 결과는 올해 말 발표 예정
- 다수의 지역들이 특화 전략의 효용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조사 대상 지역의 80%가 EU 자금 수령 요건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전략 문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답변
- 또한, 혁신 역량이 낮은 지역은 전략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집행위의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하였음
- 일부 지역은 소수의 특정 분야만을 목표로 삼았으나, 다른 지역은 "에너지"처럼 매우 광범위한 분야를 다수 나열, 이로 인해 목표가 불분명한 자금 분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튀르텔봄은 "이런 계획 간 불일치가 '우선순위화(prioritisation)'의 목적을 다소 훼손한다"고 언급
- 브라이트는 집행위 지역정책총국(DG REGIO)과의 논의에서 "집행위도 신흥 지역들의 역량 구축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전언
- 집행위의 역할 중 하나는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나, 감사원은 이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튀르텔봄은 협력 강화를 통해 덜 혁신적인 지역이 더 큰 행정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

* 예) 스마트 특화(community of Practice Observatory)를 통한 협력 지원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esearch-and-innovation-gap/auditors-urge-greater-links-between-regional-and-eu-innovation>

6 새로운 항생제 내성 연구 파트너십 출범(9.30)

- 호라이즌 유럽에 항생제 내성(AMR) 연구 파트너십이 출범했으며, 향후 10년간 새로운 항생제 치료법 개발을 목표로 함
 - 새롭게 출범한 'European Partnership on One Health Antimicrobial Resistance' 파트너십에 총 30개국이 참여해 2억 5,300만 유로를 공동 출자하며, 이 중 7,500만 유로는 호라이즌 유럽에서 제공
 - 첫 번째 공모는 치료를 중심으로 약 3,500만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고, 11월 개시되며 세부 공고는 10월 중순 사전 발표 예정
 - 치료 분야에는 새로운 항생제 연구, 기존 치료법의 임상효능 개선, 접근성·품질·활용 장벽 파악, 경제적 인센티브 및 규제 영향평가 등이 포함
 - 향후 6년간 매년 하나의 대규모 공모가 진행되며, 격년으로 역량 강화 목적의 소규모 공모도 시행 예정
 - 공모 신청 자격은 공동 자금 지원에 참여한 30개국* 내 기관에 한함
-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몰도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 이번 파트너십은 호라이즌 2020의 항생제 내성 공동 프로그램 이니셔티브의 후속이며, 전보다 예산과 참여국이 확대되었고, 단순 연구뿐만 아니라 혁신 지원 기관도 포함 예정. 이는 최근 몇 년간 항생제 내성 연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니셔티브는 스웨덴이 주도(현재까지 스웨덴이 주도하는 유일한 호라이즌 파트너십). 글로벌 협업을 지향하여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참여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와의 연계도 추진 중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antimicrobial-resistance/horizon-europes-new-antimicrobial-resistance-partnership-looks>

7 유럽 대학 단체, EU 비자 전략에 ‘심층적 개혁’ 필요[9.23]

- 유럽연구대학연맹(LERU)은 새로운 EU 비자전략 수립에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서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개혁”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8월 학생과 고급 인력(연구자, 혁신가, 기업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비자 정책을 위한 증거 수집 절차에 착수했으며, LERU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
 - LERU는 연구자와 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삼은 점은 환영하면서도, 각국의 제도적 병목현상, 복잡한 이민 규정, 부정적인 정치 분위기가 유럽 유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
 - 비자 절차의 간소화 및 디지털화가 EU 연구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참여의 시의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현재는 과도한 행정 절차, 긴 대기 시간, 불필요한 비용이 문제라고 함

○ LERU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

- 중앙 집중식 디지털 포털을 통한 원스톱 서류 제출 및 확인 절차 구축
- 대학 등록증만으로 단기 학생 비자 발급 인정
- 성수기 학생 비자 발급 우선 처리 및 유망 연구자·학자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공
- 개발도상국 출신 지원자를 고려한 비자 수수료 차등 부과 및 장학금 수혜자,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초빙 연구자 등은 면제 고려
- 가족 재결합 절차 간소화 및 예측 가능성 강화 등을 권고

- LERU는 단순한 행정 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러한 개선 없이는 EU가 인재 유치·유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경고
-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연구·학습·혁신 목적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안 기준을 유지하면서 합법적 이동을 촉진해야 하며, 국제적 협력이 방해받지 않고, 위험을 관리하며, 대학과 연구기관이 행정 절차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

출처

<https://www.researchprofessional.com/0/rr/news/europe/regulation/2025/9/EU-visa-strategy-requires-deep-reforms---says-university-group.html>

8] 집행위, 연구기반 정책브리프 작성에 관한 실용적 조언 제공(9.30)

- 집행위원회는 연구자들이 정책 담당자에게 연구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정책 브리핑 작성 [가이드](#)를 발표
 -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는 서로 다른 언어와 논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양측 간 의사소통은 오래된 과제로 지적됨. 최근 Nature 설문조사에 따르면 80%는 정책 담당자가 과학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73%는 연구자들이 정책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평가
 - 유사한 EU 설문에서는 연구자의 60%가 과학정책 활동에 대해 기관으로부터 인정이나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
 - 가이드 핵심 조언은 간결하게, 중요 정보를 감추지 말고 앞에 배치, 일상적인 언어 사용
 - 정책 브리프는 하나의 접근방식일 뿐이며, 이외에도 워크숍, 학술대회 발표, 공공 의견수렴, SNS 공유 등 다양한 전달 방식이 존재. 향후 집행위 산하 연구집행기관(REA)은 이러한 다른 방식에 대한 가이드도 추가로 제공 예정
 - 보완 도구로 연구자의 역량 진단 및 교육 필요성 파악을 돕는 온라인 도구 'Smart4Policy'와 2일짜리 과학 허브 교육 과정 등도 있음
 - 연구자들은 Horizon Booster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 관련 지원을 포함 프로젝트 영향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료 가이드를 받을 수 있음
- 가이드는 정책 브리핑 작성을 위한 주요 원칙을 제공. 브리핑은 전략적이고 시기적절한 정책 소통 도구로 활용되어야 하며, 연구자들의 능동적인 접근이 필요
 - 과학자들은 결과가 완전해야 공유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정책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결정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말 것
 - 먼저 이해관계자 매핑을 통해 어떤 정책 담당자에게, 어떤 채널로 접근할지를 대상을 명확히 할 것

- 관련 법안 논의 시점이나 정책 행사 일정 등 정책 맥락에 맞춰 공개 시점을 선정해야 주목받을 수 있음
- 프로젝트 주제와 연관된 올바른 정책 담당자를 찾아 미팅을 요청하고, 초안 공유도 고려 가능
- 이메일로 직접 전달하는 것도 유효할 수 있으며, 특히 이미 관심이 있는 인물을 찾는 것이 중요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how-turn-your-eu-project-results-policy>

9] 메타과학(metascience) 연구, 기관 운영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영진 반발과 예산 부족에 직면(9.30)

- 유럽 일부 대학과 연구지원기관 내에서 과학 과정 자체를 연구하는 메타과학자(metascientists)들이 실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도 개선과 기관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분석을 수행 중
 - 연구비 분배 방식 개선, 비전문적 행동 실태 파악 등을 수행하는 이들의 활동은 제한된 예산과 불편한 결과를 반기지 않는 대학 고위층의 저항이라는 난관에 직면해 있음
 - 예를 들어 리즈대학교에서는 내부 설문을 통해 “우려할 만한 비율”의 직원이 비전문적 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판 훼손 우려로 연구 결과 공개에 큰 제약이 따름. 설문조사 결과가 내부적으로 공유되기까지 2년이 걸렸으며, 재정 압박과 평판 우려로 공개가 지연
 - 캠브리지대학의 경우 연구전략팀이 남녀 간 연구비 수주 차이를 분석했고, 결과는 일부 민감했지만 대학 고위층과의 조율을 통해 공개를 추진
 - 민간기관인 덴마크 노보노르디스크 재단도 메타과학 연구에 참여해, 혁신적 연구 실적이 있는 지원자드링 오히려 낮은 평가를 받거나, 자기 홍보적 표현이 심사에 유리하다는 결과를 도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재단의 평가 기준 재검토로 이어졌으며, 혁신성, 품질, 실현 가능성 등 개념의 명확화 필요성도 제기됨
- 7월 Metascience 2025 컨퍼런스에서 메타과학자들은 고위층 반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공유
 - 민감한 결과 발표 시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맥락을 제공하고, 사전 공지 및 설명을 통해 신뢰 형성을 시도
 - 캠브리지대는 메타과학 프로젝트를 조기에 공개해 ‘공표 의무감’을 형성함으로써 결과 은폐 우려를 줄이는 전략을 사용
-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 문제에 직면

- 현재 대부분의 메타과학 활동은 기존 직무 외에 추가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별도의 지정 예산이나 인력 채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지속 가능성에 한계
- 일각에서는 메타과학이 과도한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연구자와의 신뢰 기반 형성과 기존 행정 데이터 활용 등으로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병행됨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how-run-experiments-your-own-research-organisation>

2.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① 유럽혁신위원회(EIC) Transition 공모에 역대 최다 제안서 접수(9.29)

- 유럽혁신위원회(EIC)가 최근 마감된 'EIC Transition' 공모에 총 611건의 제안을 접수,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
 - 참가자는 총 40개국에 걸쳐 있으며,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 순으로 신청이 많았음
 - 지원기관 중 민간 부문이 5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대학(27%)과 연구기관(17%) 순이었음
 - EIC Transition 프로젝트는 EIC Pathfinder, 미래 및 첨단기술(FET), 유럽연구위원회(ERC)의 개념증명 프로젝트 결과를 기반으로 기술을 성숙시키고 구체적인 사업화 가능성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임
 - 총 9,800만 유로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프로젝트당 최대 250만 유로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기술을 실제 응용 환경에서 검증하고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데 활용됨
 - 'EIC Transition Open' 공모는 특정 주제 제한 없이 모든 과학, 기술, 응용 분야를 대상으로 함
 - 1차 평가를 통과한 제안은 올해 12월 초 인터뷰 진행. 2026년 1월 중에 평가 결과를 통보받게 되며, 선정된 프로젝트는 2026년 5~6월 중 시작 예정

출처 https://eic.ec.europa.eu/news/record-number-proposals-submitted-eic-transition-call-2025-09-29_en

② 집행위, 기술 인프라 자본 수요에 대한 분석 보고서 발간(9.25)

- 최근 발표된 기술 인프라 자본에 대한 [보고서](#)는 2030년까지 EU 내 기술인프라의 자본 지출 및 운영 비용에 필요한 자금 수요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제시
 - 기술 인프라는 시장 진입 전 기술의 개발, 시험, 확장을 지원하는 시설, 장비, 역량, 자원을 의미하며, 연구혁신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 수행
 - 주로 산업계 사용자를 지원하며, 민간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첨단 및 성숙 기술의 산업 확산을 가속화함
 - 연구는 기술 인프라에 대한 가용 자금 확대를 위한 금융 수단의 잠재력을 검토하고, 관련 주요 장애요인도 함께 분석
 - 특히 기술 인프라 재정 확보의 어려움과 기존 금융 도구의 한계가 주요 과제로 지적됨
- 보고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권고안을 제시
 -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기술 인프라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EU, 국가, 지역 차원에서 수요측 지원 수단(혁신 바우처 제도, 접근 지원 제도 등) 확대
 - 호라이즌 유럽에서 보조금과 지분투자 또는 대출을 결합한 혼합형 금융 수단을 도입하여 기술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활성화. 이는 사용료, 구독 또는 약정 계약, 성공 기반 가격 책정, 전략적 파트너십 등을 통한 수익 창출 모델과 연계하여 사용자 혁신 성공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일치시킬 수 있음
 - 인프라 운영자 및 비전문 투자자 대상 인식 제고, 프로젝트 구조화 자문 제공, 기술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구축 등 핵심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술 지원 프로그램 마련

출처 <https://era.gv.at/news-items/study-examines-funding-needs-fof-technology-infrastructure/>

③ 집행위, 호라이즌 유럽의 기술 진행상황을 분석한 TRL 분석 보고서 발간(9.25)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 성숙도 수준(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이번 분석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들의 현재 또는 예상되는 TRL 수준을 개괄적으로 보여줌
 - 보고서는 호라이즌 유럽 내 TRL 보고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을 위한 고려 사항을 제시
 - TRL은 기술 발전을 나타내는 유용한 지표로 인정되지만, 프로젝트 및 정책 담당자들의 피드백에 따르면 해석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과학 분야별로 정확하고 통일된 보고를 위한 세부적인 지침이 부족함
 - 이에 따라 프로젝트 담당자와 수혜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도구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옴
 - 분석에 따르면 호라이즌 유럽은 주로 기술 개발 초기~중기(TRL 1~5) 단계에 집중 투자해 왔으며, 기술을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한 고도화 단계(TRL 6~9) 투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음
 - 이는 EU의 경쟁력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과제로, 이른바 ‘죽음의 계곡 (valleys of death)’을 극복하고 기술을 실제 제품 및 서비스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함
 - 차기 FP10에서는 예산 증가와 함께 높은 TRL 수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유럽의 연구 성과가 실질적인 혁신과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담겨 있음

출처 <https://era.gv.at/news-items/new-report-analyses-trls-in-horizon-europe/>

4 유럽 7대 연구 인프라 프로젝트(9.23)

- 집행위가 최근 인프라 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Science|Business는
최다 자금 지원 수혜 인프라 프로젝트들에 주목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인프라 전략을 채택하며 연구 인프라 지원
강화를 약속했으며, 현재까지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받은 주요 프로젝트들이 주목받고 있음
 - EU는 2021년 이후 총 12억 유로를 177개의 연구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 자금 대부분은 유럽 오픈 사이언스 클라우드 등 오픈 사이언스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연구 인프라 서비스 개발에 사용됨
 - 현재까지 자금 측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음

GÉANT: 연구·교육 커뮤니티를 위한 범유럽 데이터 네트워크

- 유럽 전역의 국가 연구 및 교육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이터 인프라
-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인프라의 복원력, 보안성,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 건의 보조금을 지원받음(GN5-1, 5,500만 유로; GN5-2, 8,000만 유로; GN5-IC1, 1,500만 유로)

EBrains: 신경과학 및 뇌 연구 인프라

- 신경과학 중심 가상허브 구축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로, 3,800만 유로를 지원받음
- 뇌 지도 표준화, 건강 및 병리학적 데이터 통합, 디지털 트윈 인프라 개발 포함
- 브뤼셀에 위치한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 61개 기관이 참여

Oscars: 연구 및 사회를 위한 오픈 사이언스 클러스터 활동

- 유럽의 오픈 사이언스 확산을 목표로 한 2,500만 유로 규모의 프로젝트
- 다양한 커뮤니티의 참여 유도 및 오픈 사이언스 실천 기반 마련
- 오픈 사이언스 활용을 지원하는 상향식 프로젝트에 약 1,600만 유로 배정

Isidore: 감염병 발생 연구를 위한 통합 서비스

- 2,100만 유로 규모의 감염병 연구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 코로나바이러스 등 병원체 대응을 위한 유럽 연구 기반 마련
- 브뤼셀에 위치한 고병원성 병원체 연구 인프라 기관이 주도, 158개 파트너 참여

TerraDT: 빙권, 지표면 및 관련 지구 시스템 디지털 트윈

- 디지털 지구 프로젝트의 일부로, 빙하·토지·에어로졸 등 기후 요소 정밀 모델링을 위한 1,500만 유로 프로젝트
- 핀란드 CSC-IT 과학센터가 주도, 스페인, 독일 등 주요 연구기관 참여

Weather Generator

- 차세대 기상 예측 모델 개발 프로젝트로, 1,500만 유로 지원
- 영국의 유럽 중기기상예보센터(ECMWF)가 주도하고 독일, 노르웨이 등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

CanServ: 유럽 전역 최첨단 암 연구 서비스

- 1,480만 유로 규모의 유럽 암 연구 인프라 통합 프로젝트
- 기존 종양학 연구 인프라를 연결하고 정밀의료 연구를 지원할 서비스 포털 구축
- 유럽 바이오뱅크 및 생물자원 연구 인프라가 주도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research-infrastructures/data-corner-horizon-europes-six-biggest-research-infrastructure>

3. EU 연구성과

① [성공사례] 유럽 농지 유기농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

- 유럽 농지를 유기농으로 전환하기 위한 OrganicTargets4EU 프로젝트가 2022년부터 진행 중임
 -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EU 농지의 25%를 유기농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2023년 기준 전환율은 11%에 머무르고 있음
 - 이를 달성하기 위해 10개 회원국과 스위스의 연구자, 농민,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OrganicTargets4EU' 프로젝트가 2022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진행됨
 - 이 프로젝트는 유기농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농민 맞춤형 솔루션을 실험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데이터와 시나리오를 제공
 - 유기농 전환은 농민에게 상당한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을 수반. 따라서 농부들에게 전환을 고려할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지원 정책, 시장 안정성, 기술 지원이 필수적임
 - 독일, 프랑스에서는 지원 부족으로 전환율이 정체되고 있지만, 그리스, 포르투갈 등에서는 보조금 확대와 자문 지원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연구팀은 농부들과 직접 솔루션을 테스트하며 전략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프로젝트는 8개국(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루마니아)의 지역 파트너를 통해 농민 대상 워크숍을 운영하며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독일에서는 식수 보호를 위한 유기농업 지원 사례가 새로운 확산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 워크숍에서 도출된 실천 사례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실무 초록 (practice abstract)' 형태로 공개되며, 신규 전환뿐만 아니라 기존 유기농

농가의 유지에도 초점을 맞춤

○ 프로젝트는 또한 국가 간 정책·연구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 CORE Organic Network를 통해 EU 각국의 연구 자금 기관, 농업부처, 관련 단체들과 협력 중임
- 네트워크를 이끄는 Trkulja는 유기농은 단기적 유행이 아니라 농업 전반의 변혁을 향한 장기적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

○ 연구팀은 또한 유기농 양식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시나리오와 공급망 변화를 모색

- 유기농 양식업도 주요 관심사로, 2015~2020년 사이 60% 성장했지만 이후 성장세가 정체됨
- 연구팀은 높은 비용, 복잡한 규제, 부족한 인센티브 등 주요 장애 요인을 파악했으며, 다양한 성장 시나리오와 공급망 전략을 통해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 중임
- 유기농 목표 달성을 위해 4가지 시나리오를 설계했으며, 이는 시장 수요 주도형, EU 정책 중심형 등 다양한 조건 하에서의 정책 효과를 예측하는 데 활용됨
- 최종 정책 권고안은 2025년 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임
- OrganicTargets4EU 최종 회의는 2025년 11월 4~5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TP Organics '유기농 혁신의 날' 행사에서 개최되며, 이 행사에서 차기 공동농업정책과 EU 유기농 실행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 연구진은 이번 프로젝트가 EU 유기농 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음

OrganicTargets4EU 프로젝트

- 기간 : 2022.09 ~ 2026.02
- 예산 : 약 3,999,768.75 유로 (EU 100% 지원)
- 총괄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EUROPEAN UNION REGIONAL GROUP (스웨덴)

출처

<https://project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en/horizon-magazine/seeds-change-can-europes-organic-farming-shape-future-food>

2 [성공사례] New Cotton 프로젝트, 폐섬유를 활용한 순환형 해결책 제시

- EU 지원을 받은 핀란드 스타트업 Infinited Fiber Company가 주도한 'New Cotton' 프로젝트는 폐섬유를 프리미엄 섬유로 재탄생시켜 순환형 패션 가능성을 입증함
 - 매년 수백만 톤의 섬유가 매립지에 버려져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만들어 내며, 이러한 환경 위기는 패스트 패션 업계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음
 - New Cotton 프로젝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섬유를 인피나(Infinna™)라는 셀룰로오스 카바메이트 섬유로 재생산하는 기술을 적용
-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브랜드, 섬유 생산자, 공급망 파트너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통합적 협력이었음
 - 스타트업 CMO인 Karila는 회사가 단독으로 순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전체 공급망이 진화해야 한다고 지적
 - H&M과 Adidas 같은 브랜드부터 공급망 파트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하나로 모아 함께 시제품을 제작하고, 생산 기술을 개선하고, 실제 제품을 출시함
- 프로젝트는 또 다른 핵심 과제인 순환 공정의 환경 영향평가를 해결
 - 순환 생산 시스템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데 기존 수명주기평가(LCA)가 한계를 보이자, 프로젝트팀은 순환 산업에 적합한 새로운 평가 방법을 도입해 적용함
 - 프로젝트 파트너들의 높은 헌신도도 주목할 만한데, Karila는 모든 참여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약속된 일정과 목표를 달성했다고 언급
 - H&M은 추가로 요구된 식물 제품도 빠르게 개발하며 대형 브랜드도 빠르게 혁신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프로젝트는 단순한 폐기물 기술 실험을 넘어 경제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순환 패션 모델을 제시

- 패션 브랜드, 섬유 생산업체, 연구자들을 한데 모아 순환형 모델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추진할 실질적인 통찰력을 제공
- 또한 재활용 소재 인센티브, 생산자 책임 확대 등과 관련된 논의에 프로젝트 결과가 활용되는 등 EU 차원의 규제 논의에도 반영됨
- Adidas의 EU 지원 프로젝트 'T-REX' 등 후속 사업에도 영감을 제공
- 이번 프로젝트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해 섬유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동시에 이끌 수 있음을 증명

New Cotton 프로젝트

- 기간 : 2020.10 ~ 2024.03
- 예산 : 약 8,813,414.60 유로 (EU 6,745,801.25 유로 지원)
- 총괄 : INFINITED FIBER COMPANY OY (핀란드)

출처

<https://project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en/projects/success-stories/all/waste-wardrobe-future-fashion>